예산안 처리 파국·타결 기로…'김진표 중재안' 주목

여야 수용시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결렬시 연말까지 공전

'법인세 1%p 인하·경찰국 예산 예비비 활용' 여야 의견 수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막판 협의를 이어 갔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등 이전 'D데이'를 두 차례 넘긴 가운데 김 의장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의 여야 수용 여부에 따라 예산 정국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일단 오전 중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이날 중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여야는 합의안 마련을 목표로 벼랑 끝 담판을 벌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p만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앞서 정부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교착 국면을 푸는 데 실패하자 이날 수정 중재안을 내놓았다.

법인세법을 비롯한 정부 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묶여 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향후 협의를 거쳐 예비비 지출 가능성을 살려 놓는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받아든 양당 원내대표는 일단 즉각적인 가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각 당에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서 의장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말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인 만큼 무겁게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예산안 해결의 열쇠는 정부·여당이 갖고 있다.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우선 우리는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더 늦춰지는 것도 부담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법인세 인하 및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어서 야당 측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감지된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과 관련해 '정부와 얘기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별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럴(수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 모르겠다. 여러 전문가와 상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에서도 중재안으로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최종 중재안 거부 및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 강행,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공전 등에 대한 부담 등이 최종 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법인세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저쪽 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심 쏠린 예산안 회동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尹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할 것"

청와대 영빈관서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요 규제도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 그는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서삼석,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선정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 국정감사까지 3년 연속 농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농어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 쌀값 폭락 문제에 대응해서는 6월부터 9월 1일 사이에만 민주당 국회의원 128인이 연명한 성명 등 기자회견 4회, 농해수위에서 대안 촉구 2회, 정책토론회 5회 주최 등 양곡관리법 개정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연륙된 섬 지역 택비의 추가배송비 폐지를 이끌어낸 것도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큰 성과 중 하나다. 수차례에 걸친 의원실과 택배 3사와의 간담회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장 10월 1일부터, 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11월 1일부터 신안군을 비롯한 연륙된 섬 지역 전체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김진수기자

여의도 클릭

이병훈 "박물관·미술관 설립권 지방에 넘겨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15일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며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음에도 여전히 문체부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무늬만 지방 이양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 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문체부가 협의해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지방 이양 사무로 결정한 것은 해당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도 될 만큼의 충분한 자치 역량이 갖춰졌고 지역에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예산 편성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사업의 사전 평가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민형배 '장기 기증자' 배려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을)은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 기록 열람과 발급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법',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 기록 열람·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 과정의 필수 요소다. 현재 의무 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 판정 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정절차까지 밟아야 했다. 이는 기증과정 지연, 급기야 기증 중단·이식 포기로까지 이어졌다. 그간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 의료인이 장기 기증 대상자 등의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 11월 22일 민 의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장기구득기관 의무기록 열람·교부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 의식과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기증 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기자